

안양대학교 논문집 제20·21집(2001)
인문과학편 pp.21-40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관한 진단과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

A Diagnosis to the Political/Economical Situation in Korea
& a Biblical/Calvinistic Alternative Plan

김 성 봉**
Kim, Sung-Bong

요 약

정치 현실은 주로 국민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하였고, 경제 현실은 주로 국민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정치 현실에서나 경제 현실 모두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사람의 죄성에 대한 무언급과 무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뿌리 깊은 함정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억제 조치가 없이는 그 어떠한 처방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소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는 의약 분업의 결과를 잇을 수 없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어렵게 실시된 의약분업이었지만 막상 실시되고 나니 어떤 결과가 나왔던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람은 그다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정치·제도나 경제 제도 모두에 요소 요소마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가지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현대에 있어서

* 본 논문은 2001년 8월 개혁주의 성경연구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 2001년 8월 이후로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은 그 시차를 감안하여 읽어주면 좋을 것이다.

** 신학과 부교수

이같은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여겨질 지 모르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헨리 미터의 표현대로 “칼빈주의자에게는 교회 정치는 실제에 있어서 국가 제도의 모형”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한 여러 사항들을 국가가 경청하여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실천적 방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 교회들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정치·경제적인 기회에 실천하여 그 실효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그 효과가 교회를 넘어 세속사회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일반은총에 속한 국가조차도 그 실효성 때문이라도 그 같은 발상과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이 만족스러운가? 이 같은 물음을 섞여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물을 수 있겠고, 개혁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물을 수 있겠다. 이 같은 물음에 대하여 만족스럽다고 대답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물음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이 섞여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대답일 수도 있겠고, 개혁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대답일 수도 있겠다. 아마 대다수 우리의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일 것이다. 그럼 현실에 대해 이처럼 불만족하다는 인식 가운데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개혁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제기의 관건이다. 논자는 일개 신학자이긴 해도 정치 경제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거창하게 다룰 생각은 없다. 또 그렇게 한다 해서 귀를 기울일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섞여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특별히 개혁신앙을 가지고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 작은 학급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 특유의 의견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듯이, 또는 한 작은 직장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 특유의 의견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듯이, 국가라는 보다 크고 복잡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 특유의 의견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 청자들은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발표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먼저 정치를 다루고 다음으로 경제를 다루겠는데,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 정치의 제 문제를 열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일반학자들의 발전적 제안들을 살피고, 이어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대안들을 살펴 본 뒤에,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을 모색해보며, 경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한국 경제의 제 문제를 열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일반학자들의 발전적 제안들을 살피고, 이어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대안들을 살펴 본 뒤에,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의 문제와 그에 대한 제안을 위하여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펴낸 새천년 비전과 전략 시리즈¹⁾와 경실련 정책협의회에서 펴낸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²⁾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을 위하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 4 권 20장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 에밀 두메르그의 「칼빈사상의 성격과 구조」 등을 주요 자료로 참고하였다.

I. 정치에 있어서

1. 오늘날 한국 정치의 제 문제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로 다양한 내용들이 열거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백성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들만 언급하고자 한다.

1) 1987년이래 지금껏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군부 독재의 후유증으로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스스로를 국가에 대하여 주권을 가진 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할 때에 투표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세는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거와 관련된 구태(舊態)를 국민 스스로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이 시리즈는 2000년 2월에 나남 출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 1 권: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제 2 권: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제 3 권: 새천년의 한국경제; 제 4 권: 새천년의 한국인, 한국사회; 제 5 권: 새천년의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사회; 제 6 권: 새천년의 환경과 국토; 제 7 권: 세계의 새천년 비전.

2) 경실련 정책협의회(편),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서울: 비봉출판사, 2000.

4 안양대학교 논문집 제20·21집(2001)

2) 또한 투표의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까 지도) 역시 저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한 형편이다. 책임을 맡은 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큰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듯이 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정부 또한 '국민의 정부'라고 표방은 하면서도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다지 관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억압하는 방식은 여전히 군부 독재 치하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4) 삼권분립이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불이익을 국민이 떠 안게 되어 있다. 삼권이 분립되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독립하여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지 아니하고, 입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권한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한다면, 그런 삼권분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행정부는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며, 입법부는 철저히 국민의 유익을 대변해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서로가 함께 있으며 견제하여야 명실상 부한 삼권분립이 될 것이다.

5) 이 문제는 다시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언론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거의 제왕(帝王)적 수준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생기는 잘못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6) 정당 정치의 미숙과 파당적 정당 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양대 정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로로 보아서는 언제 또 다시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하게 될 지 모르는, 정강과 정책이 없이 권력쟁취만 지향하는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민주국가라고 표방은 하는데도 국민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

7) 민족 통일의 과제를 두고 남한의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 학자들은 어떤 발전적 제안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2. 일반학자들의 발전적 제안

학자들은 대체로 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의 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 혹은 절차민주주의로 규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심의(토론)민주주의’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이제 그 주장하는 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강정인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철학적·이념적 지표’를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으로 제시하였다.¹⁾ 그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하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내실화요, 다른 하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고,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 시민의 상호대립적인 자기 이익의 보호를 목표로 한 것인데 비하여, 참여민주주의는 개별 시민들의 심의와 합의를 통해 공동선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실화한다고 했을 때, 현금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명분상으로는 민주주의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제대로 그 기능을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강정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적인 요소와 자유주의적인 요소로 나누어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적 요소는 광범위하게 수용·실천되고 있지만, 자유주의적 요소들은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고 진단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지배, 다수결에 의한 지배 같은 것을 가리키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관용의 원칙, 인권보장, 권력분립, 법치주의, 공사영역의 분리 및 제한 국가의 원리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자유주의적 요소가 현대 민주주의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강정인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 요건으로 합법적인 불공정 요소들을 살펴 그 여건들을 개선하고 - 예를 들어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련한 정치관련법을 개정 - 나아가 비합법적인 불공정 요소들을 살펴 그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기를 - 예를 들어 한국 정당제도의 낙후성을 개선할 적절한 정당법의 개정 - 주장할 뿐 아니라, 성적 불평등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자유주의의 내실화의 방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제한 국가의 원리를 세우고 공사영역의 분리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²⁾

1) 강정인, “21세기 민주주의의 철학적·이념적 지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중심으로”, 백경남·송하중 외,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서울:나남출판, 2000, pp. 21-66.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와 국제적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천 방안으로는 국민참여적 행정을 강화하고, 정부위원회 제도를 개혁하며, 사법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으로는 직장생활의 민주화, 국가권한의 시민단체에로의 이양, 국가에 대한 민주적 압력수단으로서의 시민운동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으로서는 국내외의 초국적 시민운동들과 연대하여 유엔의 개혁, 기존 국제법의 실효성 확보 및 새로운 민주적 국제법의 제정, 지구적 민주주의의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³⁾

같은 맥락에서 임혁백도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심의(토론)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⁴⁾

3.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대안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 국민 사이에 만연한 정치불신과 냉소주의 그리고 금권, 타락 선거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깨끗한 정치, 열린 정치, 효율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기본적인 개혁이 시급한데, 그것과 아울러 권력의 부패를 방지, 감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⁵⁾ 이를 위하여 자유와 공정성의 두 가지 기본 이념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선거제도를 개혁할 것, 비공개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의한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공개화, 투명화,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할 것, 보스 중심의 비민주적 사당구조를 민주적 정당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직후보 추천 과정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당제도를 개혁할 것,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확대하고 실사

2) 같은 글, pp. 30-39.

3) 같은 글, pp. 40-59.

4) 임혁백, “심의(토론)민주주의의 대안”, 백경남·송하중 외,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pp. 205-234.

5) 경실련 정책협의회(편), p. 350.

를 강화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할 것, 공직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직무기능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4.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

이런 정치 현실을 보고 그에 대한 이런 논의를 읽는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유의 보장에 대하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그 백성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백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도로 대의 민주주의의 내실을 기하거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꾀할 것이다. 물론 우리도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만 말해 버릴 때, 뭔가 미심쩍은 면들이 남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미심쩍은 면들이란 어떤 것들인가? 백성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때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자유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고전적으로 말하여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게 그 자유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섞여 사는 사회 속에서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사람의 모든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한다는 뜻일 것이다. 여기에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조심스럽게 그러한 관점이 대단히 낙관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죄 된 속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종교인·비종교인, 기독교인·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죄 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자유는 그 자유가 무제한 추구되었을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주게 되며, 급기야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몰아 넣기도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한 개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유사한 개인들이 모인 어떤 한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간의 죄를 고려한 국가/정부관

이런 점에 있어서 국가 또는 정부의 존재를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향

도 있다. 예를 들어 카이퍼는 정치와 관련하여 첫 번째 명제로 “하나님이 죄 때문에 행정관을 세우셨다”⁶⁾고 말하였다.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는 심오한 죄 개념으로 국가 생활의 참된 뿌리를 폭로했으며,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 중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손에서 국가와 행정관의 제도를 이제 참으로 없어서는 안될 보존의 수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자연적 충동에 힘입어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국가 권력에 숨어 있는 위험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⁷⁾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죄성은 양쪽에 다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통치하는 자나 통치 받는 자 모두에게서. 이런 연유에서 정부의 주된 특성은 “생명과 죽음의 권리”⁸⁾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와 연관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행정관은 칼을 갖고 있으며, 이 칼은 삼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삼중적 의미란 정의의 칼로서 범죄자에게 신체적 형벌을 가하며, 전쟁의 칼로서 원수에 맞서서 국가의 존귀와 권리와 이해를 방어하며, 질서의 칼로서 모든 강제적인 내란을 진압한다고 하였다.⁹⁾

3)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국가/정부관

이러한 카이퍼적인 견해는 한편으로 수긍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칼빈이 말한 국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면이 약하게 여겨질 우려가 있게 만든다. 카이퍼의 견해도 칼빈이 한 말에 근거하지만, 칼빈이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도 하였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에밀 두메르그는 “칼빈에 따르면 국가는 한 눈으로서 다른 한 눈인 교회와 서로 통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⁰⁾고 하였다. 실제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두 사상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교회는 완전해야 하며, 교회의 통치만 있으면 다른 법률을 대신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적들에 대하여, “그들은 인간사회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미련한 공상을 한다”고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법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완강하고 거만한 악인들이 만일 어떤 악한 짓을

6)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김지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터, 1996, p. 100.

7) 같은 책, p. 101.

8) 같은 책, p. 114.

9) 같은 책, p. 114.

10)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5, p. 130.

해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짓을 할까? 악행을 억제하는 권력이 전혀 없을 경우 그런 악인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¹¹⁾라고 되물었다. 카이퍼가 위의 주장을 할 때에 칼빈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면, 이 같은 칼빈의 진술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칼빈은 단락을 달리하여,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패약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이라는 뜻이다”¹²⁾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듀메르그는 칼빈의 이러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의 근거를 소극적 근거라고 말한다면, 뒤의 근거를 적극적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국가 또는 정부를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카이퍼는 “죄가 없었더라면 행정관이나 국가 질서가 없었을 것이다”¹³⁾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죄가 없었더라도 또 다른 양태의 통치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보다 포괄적인 국가/정부의 기능

칼빈은 단순히 죄의 억제 기능만을 국가 또는 정부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칼빈이 말하는 정부의 임무는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또한 집권자에게 요구하는 직책도 그러하다. 칼빈은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¹⁴⁾ 또한 칼빈은 정부의 주요 임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참으로 그 위치는 훨씬 더 귀중하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일 즉 사람들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따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한 생활 방식을 마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한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 그리고 그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

11) 칼빈, 기독교 강요, 한철하 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IV.xx.2.

12) 같은 책, IV.xx.4.

13)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p. 100.

14) 칼빈, 기독교 강요, IV.xx.2.

하지 않도록 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한다.”¹⁵⁾ 칼빈은 이 단락에서 정부의 임무와 관련하여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훼방 그리고 그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고”라고 하여, 종교를 바로 잡는 임무를 정부에 맡기는 데 대하여 부연하여 언급하고 있다. 단락을 달리하여 칼빈은 집권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¹⁶⁾ “참으로 집권자들은 진력을 다하여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침범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유의 수호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면에 있어서 칼빈은 “그들의 각성과 주의가 불충분하다면 그들은 직책에 대해서 불충실하게 되며 조국에 대해서는 반역자가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였다.

국가 통치의 중요한 기능인 백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과 관련하여 칼빈도 “참으로 집권자들은 진력을 다하여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침범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¹⁷⁾고 했다. 물론 여기서는 그 문맥상 백성 중의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 인한 자유의 감소나 침해 그리고 그 국가 밖의 사람이나 집단으로 인한 자유의 감소나 침해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말이긴 해도, 같은 내용을 집권자들에 의한 자유의 감소나 침해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성들의 자유가 감소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집권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는 집권자를 가리켜 “그들이 자유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¹⁸⁾고 말하고 있다. 집권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는 왕상 12:7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전제군주 시대에 왕의 참모들이 왕에게 이렇게 간하였다면, 오늘날 소위 민주주의 시대에는 오죽하겠는가?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통치를 다윗이 하였고, 유대 역사 속에서 그 이상이 남아 있었으며, 예수께서 오셔서 이러한 통치를 역설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¹⁹⁾

15) 같은 책, IV.xx.3.

16) 같은 책, IV.xx.8.

17) 같은 책, IV.xx.8.

18) 같은 책, IV.xx.8.

19)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신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5) 인간의 죄성을 고려한 정치제도

정치에 있어서 인간의 죄성을 고려한다면 그 정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인간의 죄성을 억제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설정하게 될 것이다. 쉬운 예로, 최근에 행해진 의약분업이라는 의욕적인 제도의 실시에서 본 것처럼, 이상과 뜻은 좋았을지 몰라도 인간의 이기적인 악성이 그 제도의 허술한 틈을 타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어놓고 말지 않았던가! 대의민주주의의 내실화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법들을 제정할 경우에 인간의 보편적인 악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악성을 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설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실련에서 제시하는 대안 중에서도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을 말하며,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런 면을 무언중에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6) 다원적 사회에서의 정치

오늘날 다원적 사회 속에서 가치, 도덕, 윤리조차 다원화되고 상대화되어 어느 하나를 다른 어느 것에 비추어 열등하다든가, 나쁘다든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악한(?) 자라도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 영향을 고려하여 그러한 자유 주장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기능을 국가 또는 통치기관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면이 간과된다면 백성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노력도 불의한(?) 집단을 양산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런 면들이 고려된 상황하에서만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표현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집권자들은 공중의 무죄와 겸손과 예절과 평온의 보호자와 옹호자로 임명되었으며,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⁰⁾

7) 권세의 기원에 대한 바른 이해

지난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래로 한국사회에는 “민주(民主)”에 대한 확신과 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2-45).

20) 같은 책, IV.xx.9.

기가 점차 더해 왔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권세의 기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이다. 악한 통치자는 그 자체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판²¹⁾이라는 칼빈의 표현을 읽게 되면, 지난 세월 동안의 소위 “악한 통치자들” 아래서의 통치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될 것이며, 이에 비하여 오늘날의 통치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도 권세의 기원이 위로부터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의식을 깨우쳐 줄 뿐 아니라,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들에게도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백성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임되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가질 때라야 사람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지난 김영삼 정부 때나 현금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우리 백성들은 지나칠 정도로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도구로 써 주시기를 구하고, 사람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는 삼가고 은혜는 하나님께만 바라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권위가 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쓰는 의미는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의미와는 다르다. 듀메르그에 의하면, 칼빈은 권위가 위로부터 온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도로 보장했다고 한다.²²⁾

정치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하겠으나, 다음 기회에 상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21) 칼빈, 기독교강요, IV.xx.25.

22) 듀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pp. 133-134.

II. 경제에 있어서

1.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세 문제

오늘날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로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백성의 평등과 관계되는 것들만 언급하고자 한다.

1) 관(官) 주도의 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대외 부채율이 높아 외환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하여 급기야는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이 시기를 잘 감당하고 극복하는 일이다.²³⁾

2) 외환 위기를 맞아 IMF 관리 체제가 되고 급격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땀 흘려 일을 하고 싶어해도 땀 흘려 일할 자리가 없는 형편이다.

3)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지만, 자신의 능력 여부와 별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4) 늙고 병들어 경제적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에 노후나 병든 처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의료혜택의 균등화나 노후에 대한 보장은 백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줄 것이다.

5) IMF 관리 체제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6) 세계경제권으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증시의 영향이 바로 한국에 미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인 불황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7) 주식의 등락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일확천금(一攫千金)을 하거나 그 반대로 순식간에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8) 백성의 가치관 내지 도덕심의 변화로 말미암아 땀 흘려 일하는 데 대한 가치가 도외시되어 생산직에 기술 계승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2001.7.27자 조선일보).

9) 기초 과학 분야나 고부가가치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적으

23) 지난 2001년 8월 이후로 상황이 진척되어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2002년 3월 27일자로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장기 외화표시 채권 기준)을 현행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상향조정했다. 본 논문은 2001년 8월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로 보았을 때 대외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희귀한 형편이다.

이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 학자들은 어떤 발전적 제안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2. 일반학자들의 발전적 제안

학자들은 한국이 당한 오늘날의 경제 위기는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의 성장잠재력 고갈”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주도적인 원리는 이른바 발전국가로 표현되는 국가에 의한 시장의 창출과 시민사회의 통제논리였다고 한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러한 발전전략은 고도의 경제성장은 물론 근대적 사회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이 발전전략은 그 성과만큼이나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며, 국가 중심의 성장 논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억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인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고 한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자들은 대체로 자유경쟁시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기능의 회복과 정상화를 꾀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어느 정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견해를 모으고 있는 듯하다. “시장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시키되 그 부정적 속성을 제어하는 것이 시장과 국가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핵심적인 관건”이라면, 그 현실적 대안으로 “시장을 민주적으로 제어하는 전략”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도가 달라 없는 듯하다고 한다.²⁵⁾ “시장을 민주적으로 제어하는 전략”이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감독과 균형의 적극적 역할”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적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은 한에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²⁶⁾

김호기는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특징짓는 현상 중의 하나로 과잉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저발전을 꼽았다.²⁷⁾ 그는 국가 주도의 발전기(1961-1987)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24) 김호기,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새로운 모색”, 백경남·송하중 외, 새천년의 한국 정치와 행정, p. 68.

25) 같은 글, pp. 91-92.

26) 같은 글, p. 92.

27) 같은 글, p. 80.

강조하는 발전국가론에서 그 설명 원리를 찾았으며, 발전국가론에서 썼던 중요한 경제정책은 금융정책과 노동정책이었는데, 억압적 노동정책과 노동통제를 통해 산업평화와 저임금 유지까지를 도모해 왔다고 보았다.²⁸⁾ 이러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부조리를 낳게 되었는데, 정경유착이 가장 좋은 실례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경유착이 갖는 중대한 문제는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후원이 시장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점차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⁹⁾ 이 같은 재벌의 차입의존 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을 그 기반으로 하여 등장한 정경유착은 한국식 성장모델이 부각시켜왔던 '효율성'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한다.³⁰⁾ 이 같은 한국의 국가 주도 발전전략은 초기 산업화에는 효율적이었는지 모르나, 내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그 성장의 잠재력은 이미 고갈되어 결국 IMF 관리 경제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분석한다.³¹⁾

이러한 시점에서 대체로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발전 모델의 중핵적인 과제는 기존의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발전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장의 합리성과 시민사회의 활력이 효율적인 국가를 매개로 적극적으로 결합되는 모델이라는 것이다.³²⁾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 중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라는 조우현의 글인데, 주요 선진국들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과다복지로 인한 폐해를 시장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립·자조·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³³⁾

3.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대안

경실련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빈익빈 부익부

28) 같은 글, p. 84.

29) 같은 글, p. 85.

30) 같은 글, p. 89.

31) 같은 글, pp. 89-90.

32) 같은 글, p. 100. 송하중도 “비정부조직의 정책참여”라는 그의 논문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pp. 371-372). 김창영도 같은 취지로 “세계화의 진전과 시장·정부의 관계”란 글에서 시장기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시장과 정부는 상호보완적인 된다고 강조하였다(김태동·김경수 외, 새천년의 한국경제, pp. 35-72).

33) 조우현,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 김태동·김경수 외, 새천년의 한국경제, pp. 125-146.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진단하고, “불공평한 조세구조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³⁴⁾ 또한 최근 한 차례 크게 바람이 불었던 비정상적 주식투기 바람과 탈세의 만연은 빈자들의 박탈감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켰으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IMF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기반으로 한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 분배를 시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정과 조세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경실련의 제안 중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투명한 기업관행 및 기업윤리 도입’이란 제목 하에서 ‘기업윤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된 평가기관을 세울 것과 기업윤리 도입을 지원하자는 제안³⁵⁾과 노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보호’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 고령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대안 제시는 참으로 인상적이다.³⁶⁾

4.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

이런 경제 현실을 보고 그에 대한 이런 논의를 읽는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복리와 평등의 보장에 대하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그 백성의 복리와 평등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백성의 복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방도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개입을 수단으로 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만 말해 버릴 때, 뭔가 석연찮은 면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뭐가 석연찮다는 것인가? 백성의 복리와 평등이라 했을 때에 주로 무엇을 말하는가? 주로 경제적인 면을 말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다수 학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34) 경실련 정책협의회(편), p. 4.

35) 같은 책, pp. 108-110.

36) 같은 책, pp. 182-185.

나에 집중되어 있다. 백성의 복리에 대하여는 조우현의 글에서 읽는 대로 “자립·자조·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말하는 정도이고, 평등에 대하여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주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지난 1948년이래 참여하게 대립되어 왔던 남북의 두 체제간의 경쟁이념이 무엇이었던가? 자유와 평등이 아니었던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 경제적 평등을 말한다 해서 가진 자로부터 강제로 수탈하여 나누어주는 식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하려고 애써야 할 과제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상존하는 한 자유라는 것도 한갓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편 속에서 그래도 1989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경실련에서 경제정의의 핵심내용이 분배정의, 곧 공정한 분배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외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개혁의 제1목표는 분배구조의 개선이어야 한다”고 까지 말한다.³⁷⁾

2) 인간의 죄를 고려한 경제 정책

재물과 관계하여서는 타락한 인간이 탐심을 갖기 마련이다. 여기서도 역시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 재물을 다루는 기업가도, 재물과 관계하여 각양 질서를 정하고 집행하는 관리도, 그리고 단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 서민조차도 누구든지 재물과 관계하여서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재물이 흐르는 곳곳에 다양한 억제 장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³⁸⁾ 교회의 교인들은 주를 향하는 마음

37) 경실련 정책협의회(편), 같은 책, 머리말과 총론에서. 경실련에서의 제안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보여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보호” pp. 182-184; 사회복지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의 과제,” “장애인 인권 문제,” “노인 고용 증진 대책,” “빈곤 여성 자립지원 대책” pp. 226-234;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교육의 기반 강화와 내실화” pp. 276-278; “여성” pp. 293-310). 이 같은 관심은 정부 주도의 개혁 정책에서는 참으로 미진한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 현 정부 하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법’이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것은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획기적 사회보장법으로서 과거에는 자활의 능력이 없는 가구주나 개인에 대해 시혜적인 차원에서 생계보조비를 지급한 것에 비해 새 법 아래서는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월 96만원(자기소득 포함)을 매월 생계, 주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10월 현재로 지원대상자는 150만 명 정도이다.

38) 이와 관련하여서는 경실련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부정부패가 발본색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히 공감이 간다(경실련 정책 협의회 편, pp. 369-372, 433-464).

에서 헌금을 하므로 교회 내 성도들간에 평균케 하는 역할을 상당히 감당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자발성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다양한 기부제도를 정하고 그에 따르는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부과로 그에 준하는 액수를 징수하는 방식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제것으로 가진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역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재물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 청지기적인 자세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종교인이자라면 공유할 수 있는 자세라 생각한다.

3) 올바른 재물관

성경에 의하면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쓸 대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 악의 뿌리이다.”(딤후 6:10) 이렇게 말한다 해서 부(富)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부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것”³⁹⁾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부, 그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다. 방해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교활함과 부패로부터 온다. ... 부는 그것 자체로서는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다.”⁴⁰⁾고 하였다. 문제는 그 부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고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들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빈자(貧者)들의 장관이라는 바로 그 조건부로, 그들은 더 풍부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배운다”⁴¹⁾고 말하였다.

4) 우선 순위

오늘날이 경제시대이고 경제가 중요시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경제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처럼 경제문제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때문에 영적 성숙 없이 경제적 여유만 갖게 되면 사람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경제적 성장은 반드시 영적 성숙과 걸음을 같이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 도덕적 타락의 모습은 차라리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는 경제적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이다. 중국이 1997년에 제시한 21세기 국가목표인

39) Opera, XXVI, p. 627.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p. 136에서 재인용.

40) Opera, XXXIII, pp. 36, 37.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p. 136에서 재인용.

41) 사도행전 주석 11:29. 에밀 두메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p. 137에서 재인용.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5대 원칙을 내세우면서 제시한 9대 방침 중의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공동발전”이 그것이다.⁴²⁾ 지난 반세기 동안 유물주의를 표방한 중국은 이렇게 표방하는데, 사상적으로 그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하였던 우리는 물질문명의 발전에 발목이 잡혀 정신문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간과해 버리지 않았던가! 오늘날 우리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타락 현상은 그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경실련에서도 제도개혁과 아울러 의식개혁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⁴³⁾ 지금의 경제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처방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바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위기를 탈출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보다 더 큰 영적·도덕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희년 사상의 현실 적용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희년 사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재산 상속의 방식으로 대를 이어 누적되며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실에 비하여 옛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희년 제도⁴⁴⁾는 그런 경제적 불평등의 가능성을 근절시키는 제도적 장치였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빛을 쬐던 것이 면제되며, 팔았던 토지를 되찾게 되고, 심지어 종으로 팔린 경우라도 방면되는 획기적인 조치를 매 50년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시행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이상적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제대로 시행되어 보지 못했던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갖는 정신은 우리가 취할 수 있으리라 고 여긴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동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시행

42) 장공자, “중국의 새천년 준비상황”, 김태동 외, 세계의 새천년 비전, 서울:나남, 2000, pp. 211-230.

43) 경실련 정책협의회(편), p. xi. “선진적인 제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관행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의식개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44) 구약성경 레위기 25:8-55에 언급되어 있다. 일곱 번의 안식년 다음 해(제 50년)의 속죄 일로부터 만 1년간 지키던 희년 규례로서 그 기간(8-12절)과 기업의 원소유주 환원법(13-17절), 안식년의 생활대책(18-22절), 토지 환원법(23-24절), 채무 탕감법(35-38절), 노예 환원법(39-55절)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땅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일깨우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와 해방을 모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쁨의 절기이다(전봉준 편, 라이프 성경, 기독교회사, sp. 184-187).

될 수 있었던 이러한 제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동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희박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맺음 말

지금까지 논자는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이라는 제목 하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 현실과 경제 현실을 말하고, 그에 대한 그 방면의 일반 학자들과 경실련이 제안한 대안들을 살핀 후에 나름대로 개혁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치 현실은 주로 국민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하였고, 경제 현실은 주로 국민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정치 현실에서나 경제 현실 모두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사람의 죄성에 대한 무언급과 무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뿌리 깊은 함정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억제 조치가 없이는 그 어떠한 처방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소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는 의약 분업의 결과를 잇을 수 없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어렵게 실시된 의약분업이었지만 막상 실시되고 나니 어떤 결과가 나왔던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람은 그다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 모두에 요소 요소마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가지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현대에 있어서 이 같은 성경적/칼빈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헨리 미터의 표현대로 “칼빈주의자에게는 교회 정치가 실제에 있어서 국가 제도의 모형”⁴⁵⁾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한 여러 사항들을 국가가 경청하여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실천적 방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 교회들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정치·경제적인 기회에 실천하여 그 실효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그 효과가 교회를 넘어 세속사회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일반은총에 속한 국가조차도 그 실효성 때문에라도 그 같은 발상과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45) 헨리 미터, 칼빈주의, p. 98.